

북한 핵개발 실태와 대외정책

문 성 목*

- I. 문제의 제기
- II.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실태
- III. 북한의 대외정책
-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국문요약

금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어진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초강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접근방법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코앞으로 다가온 위기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핵개발 실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정확하게 검증된 바는 없다. 그동안 핵 활동을 통해 상당량의 핵물질을 확보하였고,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수준은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탄두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킨드,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준은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은

확보했다는 전제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남조선혁명노선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3대혁명역량 강화 노선 중에서 국제혁명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핵개발을 악용하고 있다. 자기들의 핵개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한 지위적 차원이라면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북한과 미국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 연습의 영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비핵화를 우선 요구하고 있다. 북핵문제로 인해 남북 관계는 물론, 대중, 대러, 대일관계 등 북한의 대외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바로 우리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인식을 반성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정권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주제어: 북한 핵개발, 대외정책, 대북제재, 장거리미사일, 핵탄두 소형화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I. 문제의 제기

1.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대북제재

2016년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시작하였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예상을 깨고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¹ 핵실험 직후 북한은 수소탄의 성공이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나섰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이 지진파 등의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수소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증폭핵분열탄 정도의 위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후 2월 7일 북한은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는 1998년 이후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역시 북한은 이를 우주개발의 대 성공으로 선전하면서 김정은의 업적으로 부각시켰다.

결국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을 보면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때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왔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그동안 북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결국, 북한에게는 시간만 벌여준 꼴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말로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김정은의 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국제사회가 적극 공감하게 된 것이다.

유엔안보리는 3월 3일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는 과거 세 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여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네 번째이다. 1945년 유엔 창설 이래 단일 국가를 향한 비군사 제재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절반 이상의 조항을 의무화(Decide)할 만큼 강도가 센 것이다.²

¹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1월 초부터 강행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금년 5월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당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한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 확보를 위해 핵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²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전문 12개 항과 구체적인 제재조치 및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본문 52개항과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해외 광물·무기·금융활동을 차단시켜 돈을 막고, 모든 물품의 운송을 감시하며,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될 소지가 있는 자금과 물품의 유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조봉현,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가안보전략』, 통권 45, p. 22.

미국도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법안을 상하 양원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3월 16일 이에 서명함으로써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미국의 특정국가를 향한 제재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것이다.

일본도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대북 송금을 차단하고 방북 인사의 일본 입국을 금지시켰다. 이 역시 초강수의 대북제재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을 두둔해 왔던 중국마저 김정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북한의 정권 붕괴는 불원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기존 대북접근과 인식에 대한 새로운 결단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70년대 이후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화해협력 기조의 통일·대북정책이 과연 타당한 접근방법인 것인가? 하는 근본적 의문도 제기되었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우리가 원하는 평화통일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개성공단의 완전가동 중단이다. 이는 유엔안보리 제재결의가 나오기 전인 2월 11일 결단한 것이다. 개성공단은 2003년 개시 이후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와 같이 여겨진 상징적 존재였다. 공단의 취지는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면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고 안정적 상황을 가져옴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기에 북한이 2006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 핵 실험과 네 차례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도발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중단되지 않았다. 2010년 3월과 11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포격도발 당시에도 개성공단은 멈추지 않았다.³ 그러나 이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정부는 완전가동 중단이라는 초강수 제재조치를 결단한 것이다. 이러한 결단의 배경에는 결국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김정은 주머니로 들어가 통치자금과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전용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핵문제에 가장 핵심 당사자인 한국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 중국 등의 호응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둘째, 대북심리전 재개이다. 대북심리전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서해충돌방지 문제를 의제로 개

³ 개성공단은 2013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잠정 폐쇄조치를 취함으로써 5개월 여간 중단된 일이 있으나, 북한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재개된 바 있다.

최하기로 한 회담 직전 전화통지문을 통해 더욱 절박한 문제가 있다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향한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수단을 철거하는 문제도 의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자기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회담에 응할 수 없다고 고집하였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2004년 6월 15일부로 확성기방송이 중단되고, 이듬해 6월에는 확성기와 모든 수단이 철거된 바 있다. 그런데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5·24조치 당시 대북확성기를 설치하였지만, 방송은 재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직후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뼈아픈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11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이다. 당시 북한은 5일 만에 즉각 방송중지를 경고하더니 10일 만에 우리 측을 향하여 포격도발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8월 22일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48시간 최후통첩을 통해 중단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24시간도 되지 않아 고위급회담을 제의해 오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당시 이른 바 2+2회담을 통해 8·25합의가 도출되고 이 합의에 따라 대북확성기방송이 중단되었다.⁴ 하지만 금번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시 우리 정부는 8·25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조치로 간주하고 동 합의에 따라 대북심리전을 재개하였다.⁵

셋째, 한미간 주한미군 사드배치문제 공식 협의를 개시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2014년 6월,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여 발사한 후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M. Scaparrotti)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본국에 사드배치를 건의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⁶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의 반대 입장을 고려하여 동 사안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른바 3NO 입장이었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공식 요청도, 논의도, 결정도 한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코앞에 다가선 상황에서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이 앞선 것이다. 즉, 한중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그리고

⁴ 당초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비서(7차 당대회 이후 부위원장으로 직함이 조정됨)는 국가안보실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김양건-김관진 회담을 제의하였다. 하지만 우리측이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나올 것을 요구하자 북한이 통일부장관도 나오라고 요구하여 황병서, 김양건-김관진, 홍용표(통일부장관) 간 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⁵ 동 합의서 3항에는 비정상적인 사태(도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방송을 중단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곧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한다면 확성기방송을 재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도발에 대한 재발방지 조항이라 할 수 있다.

⁶ <<http://news.joins.com/article/19675813>> (검색일: 2016.4.29.).

한국 내 거주하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한미동맹의 입장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내 거주하는 자군과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드배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고 무용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판단도 한 것이다.

2. 북한의 도발행태와 의도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북한은 강력 반발하고 무력시위를 이어나가면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험담을 내뱉고 있다. 거기에는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협박을 하고 나섰다. 북한은 3월 3일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직후, 300mm 신형 방사포 발사도발을 신호탄으로 스커드, 노동 등 다양한 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진행해 왔다. 특히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조치에 대해서는 자산몰수, 청산 등 극단적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는 서울과 남조선 해방작전 운운하면서 대남군사위협을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심지어 핵탄두 모형 공개, 대기권 탄두 재진입 기술보유 주장, 미사일 고체연료 개발 장면 시연 등 핵·미사일 역량을 과시한 바도 있다. 김정은은 3월 15일 “핵탄두 발사실험과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라”고 지시하였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4월 15일, 28일, 5월 31일 모두 네 차례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4월 23일에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수중사출 및 비행시험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도(red line)를 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북한이 무슨 이유로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지 그 의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 5월 초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이렇다 할 업적이 없는 김정은으로서 그의 업적을 과시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7차 당 대회에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김정은의 최고업적으로 선전한 것이 바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김정은 중심으로 결속된 북한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또 다른 원인을 든다면 지난 해 8·25합의 이후, 개최된 남북대화 결과에 대한 실망 및 대남압박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도발직후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확성기방송 재개 상황에서 최우선 과제는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는 것이었다. 당시 그 목적은 일단 달성했다. 이와 함께 남북 고위급접촉 재개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터 가시적인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25 합의 이행을 위해 개최된 제1차 남북차관급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결렬되면서 북한은 이에 실망하고 더 이상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⁷

아울러, 김정은이 이 시점에서 무모한 도발을 선택한 데는, 그동안 북한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내성이 생겼고, 이번에 자기들이 핵·미사일 도발을 한다 해도 국제사회가 그리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계산이나 기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하도록 방패막이를 해 줄 것으로 기대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개시된 이후 나타난 북한의 행태의 특이점과 그 속내를 살펴본다면, 첫째,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진 상황전개에 직면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제재를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산과 함께 도피로는 없는지 여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야기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그리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완화 내지는 무마시켜야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조치는 부당하고 불법적이라고 거침 없이 선전하고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을 외부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둘째, 초강수 반응을 과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강력한 지도자상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300mm 신형방사포를 비롯하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미사일과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그 어떤 압박도 김정은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셋째,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소위 70일 전투 및 제2의 고난의 행군, 자강력(自強力) 제일주의 및 수뇌부 결사옹위를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할 수 없도록 다잡는 조치에 매진하고 있다.⁸

⁷ 2015년 12월 11일~12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남북 차관급당국회담이 차기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회담 당시 북한 측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집요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북한은 이를 자기들의 경제적 실익 확보의 기회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⁸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강조하고 군사적 정신을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대해 아프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3명과 이은 3명의 집단탈북은 그 전조가 아닌가 판단된다.

3. 연구범위 및 중점, 한계점

본 연구의 범위는 북한 핵개발 실태와 북한의 대외정책이다. 앞서 기술한 바대로 금년 초 북 핵·미사일 도발 이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실태가 주요 관심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II장에서는 북핵·미사일 개발 실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선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대로 핵탄두가 경량화, 소형화, 표준화 되었는지 여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특히, 2월 초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이 발사된 이후,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루어 본다. 더욱이 지난 해 5월과 12월, 그리고 금년 4월에 이르기까지 김정은이 공을 들이고 있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전력화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을 해 본다.

III장에서는 북한의 대외정책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외정책의 근간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북핵·미사일 도발과 북한의 대외정책의 상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과연, 북한은 핵개발에 어떤 의도(노림수)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외교정책은 현재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김정은은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과 제재에 어떤 반응으로 나올 것인지, 여부도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외관계 상황들을 국가별로 살펴본다.

하지만,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계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확히 검증된 바 없다. 따라서 이 글 또한 북핵·미사일 관련 여러 논의에 대한 정리 수준이라는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 둔다. 다만, 북핵 관련 대외정책에 무게를 두어 분석해 본다.

IV장은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상기 일련의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국가안보에 대한 우리의 반성, 향후 평화통일의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실태

1. 핵개발 일지

북한의 핵개발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구소련의 도움을 받아 핵개발

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당시 비확산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여 원자로 도입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고 핵무기 개발에는 의사가 없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1985년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인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도 가입하고, 1992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한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은 남북 간에 먼저 개시된다. 1990년대 초 남북 총리들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8차례 고위급회담을 이어갔다. 이 회담을 통해 의미 있는 2개의 문건에 합의하였다. 그 한 가지 문건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기본합의서)이며, 다른 한 개의 합의문건은 바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비핵화선언)이다.⁹ 이 모두 1991년 타결하여 1992년 발효되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합의한 이 문건들을 북한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 것 같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기본합의서는 물론 비핵화공동선언도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휴지로 만들었다.

1차 핵 위기는 1993년 발생한다. 핵안전협정에 의거 1992년 IAEA가 북한의 영변핵시설을 사찰한 결과, 북한의 보고내용과 중요한 불일치를 확인하였다. 이에 IAEA는 북한을 향해 강제사찰을 요구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1993년 급기야 NPT를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협상의 당사자가 남북에서 미북으로 바뀌게 되었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드디어 성립된 것이다.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은 이른 바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 AF)를 타결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핵을 동결하는 조건하에 미국은 신포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고, 경수로가 완공되는 동안 매년 중유 50만 톤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2002년 2차 핵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당시 미국의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강석주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한데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미국은 더 이상 제네바합의를 이행할 수 없음을 선언하였고, 이에 반발한 북한은 2003년 1월, NPT 탈퇴라는 강수를 두었다. 그러자, 국제사회는 그동안 남북 간, 미북 간의 북핵문제 해결이 한계에 도달하자 2003년

⁹ 북한은 비핵화선언을 타결하기 원한다면 주한미군 전술핵무기를 먼저 철수하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노태우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면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했던 모양이다. 이에 한미는 주한전술핵무기를 철수조치를 하였고, 이어 1991년 11월 노태우대통령은 한반도에 핵부재 선언을 한다. 이후 남북간 비핵화선언에 합의하였지만, 북한의 속임수에 당한 결과가 된 셈이다.

중국을 의장국으로 하는 6자회담을 개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도달은 난관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그 해 9·19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동성명에 북핵 포기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성명의 이행을 앞두고 이른 바 방코 델타 아시아(Bank of Delta Asia: BDA) 사건이 발생한다.¹⁰ 이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성명의 이행이 지연된다. 이후 2·13합의와 10·3합의 등을 통해 6자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해 보려 했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이어졌고, 2008년 이후 6자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다.

<표 1>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유엔안보리 제재 일지(2006년 이후)

-
- 북한, 대포동 2호 발사(2006.7.5), 유엔 안보리 1695호 채택(7.15)
 - **1차 핵실험(2006.10.9)**, 유엔안보리 1718호 결의 채택
 - 북한,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 해체(2008.6)
 - **2차 핵실험(2009.5.25.)**, 유엔안보리 1874호 결의 채택
 - 장거리미사일(은하 3호) 발사, 2분 15초 만에 추락(2012.4.13)
동년 12월에 재발사 성공, 안보리 2087호 결의 채택
 - **3차 핵실험 실시(2013.2.12)**, 유엔 대북제재 2094호 채택
 - 북한, 영변 5MW 원자로 재가동 선언
 - * **4차 핵실험(2016.1.6)**, 장거리 미사일 발사(2.7),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3.3)
-

위 표에서 보듯이 6자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합의가 채택되었지만, 2006년 이후 북한은 네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합의를 위반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국제사회는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풀어가려는 일련의 시도는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평가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북한은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 마치 핵 포기를 시사하면서 은밀하게 핵개발을 진행해 온 것이다. 결국, 국제사회는 북한에 속아 핵개발 시간과 반대급부를 제공한 결과가 된 것이다. 사실상 유엔의 대북제재는 솜방망이에 불과하였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¹⁰ 방코델타아시아는 마카오에 있는 소규모은행으로 1970년대 초부터 북한의 국제금융거래 창구 역할을 해왔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경제적 제재조치의 하나로 2005년 9월 이 은행을 돈세탁 창구로 지목하고 북한 자금을 동결했다. 당시 동결된 금액은 약 2,500만불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북한이 강력 반발하면서 9·19성명의 이행이 지연된 사건이다.

2. 핵능력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공신력 있는 문건은 역시 국방부가 공식 출간한 국방백서라 할 것이다. 우선, 국방백서가 밝힌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¹¹ 그동안 북한은 네 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경량화나, 소형화를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핵탄두를 만들기 위한 핵물질도 상당량 확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즉, 영변 원자로에서 수차례의 핵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40여 kg을 보유하고,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고농축우라늄의 보유량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탄두가 얼마나 소형화되고 경량화 되었는지, 표준화 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9일, 김정은은 핵탄두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모형을 전격 공개하였다.¹²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탄두를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를 통해 다양한 운반수단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소형화는 어떤 수준을 말하는가? 대략 탄두무게는 1톤 이하, 직경이 90cm 이하가 될 경우 소형화로 보고 있는데, 최소한 북한은 이 정도의 소형화는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는 700kg 정도만 되어도 탑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북한의 소형화된 탄두는 우리를 직접 공격 가능한 사거리 수준의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상황에 도달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의 보유량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북한이 기 확보한 핵물질을 네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부분 사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북한이 공언한 대로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개시하고,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가동 등을 통해 핵탄두 제조를 위한 핵물질의 양이 꾸준히 증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¹¹ 국방부, 『2014 국방백서』, p. 12.

¹² 김정은이 핵탄두라고 주장하면서 지름 60cm 가량의 은색 원형 물체를 공개, 미국 북한전문웹사이트 38노스는 200~300kg의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함. 우리 정보당국은 현 상황에서 위력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로 판단. 핵보유국의 소형화 수준은 미국 110kg, 러시아 255kg, 영국 350kg임. <<http://www.hankookilbo.com/v/2132d9d284b74c6cbc784d9a70c38132>> (검색일: 2016.4.3.).

<표-2> 북한의 핵물질 추정 보유량

구 분	내 용	핵물질	제조가능량	탄두제조(추정)
플루토늄	2009, 2013 핵실험 후 잔량	30~34kg	-	6~8개
농축우라늄	원심분리기 2곳 운영시	무기급 농축 우라늄 240kg	22개	15~16개
	1곳 운영시	100kg	15개	10~11개

자료: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¹³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의 위력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은 수소탄 실험의 성공으로 주장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정보당국과 대부분의 핵문제 전문가들은 수소탄 실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금번 북한의 핵실험은 증폭핵분열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3. 미사일 능력

북한 미사일 능력의 경우도 우선, 국방백서에서 밝히고 있는 미사일 관련 기술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¹⁴ 북한은 1970년대부터 중국의 도움을 받아 탄도미사일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북한의 우방인 이집트, 이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사거리 300km의 SCUD-B, 사거리 500km의 SCUD-C를 작전배치하였다. 1990년대에는 일본까지 도달 가능한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후 작전배치하였다. 그리고 1998년에는 대포동-1호, 2006년에 대포동-2호를 시험 발사하였다.

북한은 2009년, 2012년 4월과 12월, 2016년 2월까지 6차례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3>과 같다.

¹³ 이 자료는 연합뉴스 반종빈기자가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자료 인용 그래픽 기사를 재 정리한 것임.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1000000.html?cid=GYH2016030900060044&input=1363m>> (검색일: 2016.4.3.).

¹⁴ 국방부, 앞의 책, p. 12.

<표-3>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경과¹⁵

횟수	발사일자	발사미사일	발사결과
1	1998.8.31	대포동1호(광명성1호 탑재)	발사실패(3단 분리 실패)
2	2006.7.5	대포동2호(위성탑재 미상)	발사실패(발사 40여 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
3	2009.4.5	은하2호(광명성2호 위성 탑재)	발사실패(3단 분리 실패, 3,800km 비행)
4	2012.4.13	은하3호(광명성3호 위성 탑재)	발사실패(1단 분리 실패, 460km 비행 공중폭발)
5	2012.12.12	은하3호(광명성3호 2호기 탑재)	발사성공
6	2016.2.7	광명성(은하3호 개량형), (광명성4호 위성 탑재)	발사성공(엔진성능 향상, 로켓탑재중량 증가)

여기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과연 탄두 재진입기술을 확보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김정은은 지난 3월 15일 탄두 재진입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그 실험장면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계속 실시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탄두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¹⁶ 다만, 우리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스커드(Scud)나 노동 등 단거리 미사일 탄두의 재진입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사일 역량에 있어 또 다른 한 가지 관심은 과연 북한이 미사일 연료 고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이다.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연료의 고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3월 29일에는 미사일 연료 고체화 실험 장면을 공개하면서 큰 발전이 있음을 과시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현 실태를 보면, KN-01 등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SCUD 이상 미사일은 액체연료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북한 미사일 연료가 고체화로 전환 성공시,

¹⁵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0207143649341>> 기사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검색일: 2016.4.2.).

¹⁶ 국방부 대변인은 재진입기술이라고 하면 탄소복합소재 기술, 삭마기술이나 종말유도기술을 의미, 이는 시험발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북한이 아직은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 <<http://news.joins.com/article/19724672>> (검색일: 2016.4.2.).

기습효과 및 사거리 연장 가능성에 유의하여 대처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지난 4월 23일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수중사출시험 장면을 공개하였다. 당시 함침은 사거리가 3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최소 사거리인 300km에 크게 못 미치기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해외 민간전문가들의 견해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인다.¹⁷ 북한 SLBM 기술의 진전 가능성을 우려했다.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미 항공우주연구기관인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John Schilling) 연구원은 이날 미 북한 전문웹사이트인 ‘38노스’ 기고문에서 “북한의 SLBM이 신뢰성 있게 운용되는 방향으로 기술적 진전을 보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2020년경에는 실전 배치 준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우리 국방부와 국정원도 북한이 3~4년 내 SLBM 전력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¹⁸

4. 평가 및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북한 핵·미사일 역량은 우리에게 대단히 위험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① 핵물질 지속 확보, ② 소형화, 경량화 상당부분 달성, ③ 장거리 탄도 미사일 재진입기술 확보 노력 중, ④ 중장거리 미사일 고체연료화 시도 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은 아직 미달된 것으로 보이나, 우리에게 직접 위협이 되는 단·중거리 미사일은 실전배치된 것으로 판단되며, SLBM도 수년 내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대비책 마련이 긴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택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김정은이 공언한 바대로 추가핵실험에 나설 것인가?,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진정성 있는 대화 창구에 복귀할 것인가? 7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은 국면전환용 대남대화 제의를 하고 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변화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¹⁹

¹⁷ <<http://news.donga.com/3/all/20160427/77799574/1>> (검색일: 2016.4.30.).

¹⁸ <<http://www.frontiertimes.co.kr/news/htmls/2016/03/20160331120859.html>> (검색일: 2016.4.2.).

¹⁹ 현재로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우선 중국이 북한의 주장을 옹호 두둔하고 있는 측면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자든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기존 주장의 반복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대화 제스처를 보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신으로 대화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III. 북한의 대외정책

1. 대외정책의 근간

북한의 대외정책은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핵관련 북한의 행태를 감안할 때, 소위 ‘남조선혁명 완수’를 위한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북한은 1964년 남조선혁명을 위한 소위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을 발표했다.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 내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정치적 역량과 경제적 역량,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치적 역량이란 북한 인민들을 철저히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둘째, “남한 내 혁명역량 강화”는 남한 내 민주주의운동 지원, 남한 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및 통일전선 형성, 반혁명역량 약화 등으로 요약된다. 즉, 용공세력과 반정부 세력 이른 바 친북좌파운동의 투쟁을 고무 선동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국제혁명역량 강화란, 사회주의 국가 및 제3세계 국가의 인민들과 유대 강화, 자본주의 국가 내 좌파 노동운동세력과 단결, 전 세계 반제평화애호세력(국제공산세력) 지원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산주의권의 붕괴에 따라 그들의 국제혁명역량의 강화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대남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정책이란 바로 이 국제혁명역량 강화전략의 연장선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²⁰

이러한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도 이 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보여진다. 즉, 핵·미사일 위협으로 대남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대남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강압수단으로 활용하며, 나아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관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남적화전략목표 달성을 기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의 근간을 기초로 북한은 그동안 대외정책을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 앞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²⁰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서울: 통일교육원, 2010), pp. 14~18.

2. 북핵 관련 대외관계 추이 및 전망

가. 남북관계는 당분간 복원 어려움

이 글에서는 대남관계도 북한의 대외정책 범주에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1992년, 비핵화선언을 미끼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철수를 성사시켰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이를 통해 핵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²¹

그동안 북한은 남북협상 과정에서 “핵문제는 남북 간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논의를 회피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긴장의 근원인 핵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속내가 불순한 것이었다. 결국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도구로 남남갈등 유도하였다. 심지어 북한 핵은 남한 주민의 안전을 위한 수단이며 동족을 향해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도하기도 하였다. 때때로 북한은 핵문제를 이용하여 대북지원 확보와 우리의 대북정책 전환 유도를 위한 협상지렛대로 악용해 왔다. 7차 당대회 이후 대남평화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태도변화가 없다면, 당분간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북중 관계 회복도 미지수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부터 북중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일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012년 북한은 미국과의 2·29합의를 파기하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4월 발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해 12월에 다시금 쏘았다. 그리고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취임한 2013년 초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중국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였다. 거

²¹ 당시 노태우정부는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그 결과 동구공산권 국가들을 포함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과 수교를 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양했다. 이제 남은 것은 남북관계였다.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된 상황에서 우리도 가능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감에 젖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비핵화선언과 기본합의서를 타결한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철수, 한미연합연습은 팀스피리트연습 잠정 중단 등 북한의 요구를 수용했다. 합의서 내용도 북한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북한의 정확한 속내를 알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남북관계를 정치적 업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자세가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기이다. 그해 12월에는 북중 관계의 가교역할을 해 왔던, 이른 바 중국통인 장성택을 전격 처형한 것도 북중 관계를 냉랭하게 만든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2015년 10월, 북한의 노동당 7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면서 서열 5위인 류윈산(劉雲山)의 방북을 계기로 양국관계 전환을 기대하였다. 그해 말인 12월 김정은이 아끼는 모란봉악단이 중국 공연을 통해 관계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였으나 북한 측의 일방적인 철수 조치(12.15.)로 문턱에서 다시금 악재가 된 것이다. 거기에서 김정은은 중국에 사전 통보도 없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모란봉악단의 철수가 계기가 되었다는 설을 제기하면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는 확인된 것은 아니다. 특히나 북한은 지난 2월 초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가 방북한 직후,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다.

북한은 중국이 주재하는 6자회담 합의도 파기하였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 미·북 양자차원의 노력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실패했다. 그래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이 개입하면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6자회담을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기대마저 무산되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은 중국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중지 요구도 무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막가파식 행보는 중국이 결코 북한을 버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계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제 중국의 인내도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김정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견해가 일치한다. 따라서 유엔의 대북제재를 전면적이고, 적극적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²² 다만, 대북제재 일변도에는 반대 입장이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국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논의 주장’의 속내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핵 개발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평화협정 체결로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왜

²²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월 28일,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외교장관회의 기조강연에서 중국은 반도(한반도)의 이웃으로서 반도에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북제재의 전면적 집행을 선언했다. 이어 그는 “올해 초부터 한반도 긴장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위해 거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hei.hankyung.com/hub01/201604293760I>> (검색일: 2016.4.29.).

그렇까? 북한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일까? 확인 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북핵문제 미진 시, 자기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기에 그랬다는 식의 책임 전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시되는 대목이다.²³

향후 북중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면, 우선, 6월 초 리수용의 방중이후 북중 관계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여부이다. 시진핑주석은 리수용 일행을 접견하고 북중 전통적 우호관계를 과시하였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급격한 관계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중국이 스스로 공언한 바대로 대북제재를 얼마나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지 여부이다. 그동안의 전례를 감안한다면 초반에는 실행하는 시늉만 내다가 유야무야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정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이어갈지 여부가 북중 관계를 갈음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6자회담 호응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북한의 입장은 6자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해 보인다.²⁴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효적으로 시행된다면, 국면전환을 목적으로 중국이 제시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논의 등 조건으로 회담에 복귀할지? 아니면 다른 모종의 딜(deal)을 시도할지 그 가능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다. 북미 관계

북한에게 미국이라는 존재는 그들의 의도를 좌절시키고, 북한의 의도를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다.²⁵ 북한은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핵문제 해결은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정 체결 시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즉, 적대시 정책의 핵심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연합연습을 영구 중단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지는 것은 한

²³ 즉,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도 북핵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할 경우,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면서 책임을 전가할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²⁴ 북한은 4월 30일 발표한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서 “9·19공동성명은 최종적으로 사멸됐다.”고 주장하면서, “핵은 자주이자 존엄이고 생명”이라며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없음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러한 북한입장을 감안 시 당분간 6자회담 복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는 것이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72207&ref=A>> (검색일: 2016. 4.30.).

²⁵ 김일성이 6·25전쟁을 실패한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개입 때문이다. 북한정권이 대남적화전략을 위한 제2의 6·25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도 한미동맹 때문이다. 그렇기에 북한은 미국을 철천지원수요. 몰아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

국이 정전협정 당사자 자격이 없기에 평화협정 당사자도 될 수 없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²⁶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다.²⁷ 이를 실현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정전협정 무실화 조치가 이어졌다. 급기야 2013년 3월에는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다. 북한이 잇단 무력 도발을 자행하는 것은 정전협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에 군사적 긴장 고조, 충돌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북한이 서해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집요한 도발을 기도하면서 무력화를 기도하는 것도 그 연장 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북핵문제 해결 이전에 그 어떤 평화협정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정전협정체제를 유지하고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진정한 행동이 수반된 비핵화 조치가 대화의 선결조건이다. 아울러 중국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논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북핵문제 해결 향방에 따라 북미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향후 김정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쿠바와도 관계를 개선하였다. 이란도 제재를 피해 핵을 포기하고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였다.²⁸

라. 북러 관계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러시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추후 북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중국에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러시아 측에는 언급했

²⁶ 북한은 한국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에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6·25에 참전하였고, 정전협정은 유엔군사령관이 참전국을 대표하여 서명하였다. 따라서 한국도 정전협정의 엄연한 당사자이다. 이후 1954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제네바평화회의에 한국도 당사자로서 참석했고, 1996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제네바 4자회담에서 당사국으로 참여하였다.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5조에도 남과 북이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동시에 평화협정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북한의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이다. 통일부, 『남북기본합의서』 (서울: 통일부, 2005), 본문 인용.

²⁷ 그 이전에는 남북평화협정을 주장해왔다. 김일성의 생각이 바뀐 것은 1973년 미국과 월맹, 월남, 베트남이 파리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주월 미군이 철수한 직후 공산월맹이 무력으로 자유월남을 공산화시킨 것이 자극제가 되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방법은 역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²⁸ 존 케리 국무장관은 금년 6월 초 북경에서 열린 제8차 미중전략경제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북핵 문제를 이란의 모델과 같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²⁹

러시아 입장에서든 북한을 중시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과 러시아의 동병상련의 결과일 수 있다. 거기에다 푸틴대통령의 시베리아를 포함한 동부지역 개발을 강조하는 생각과 연관되어 보인다. 중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북한의 러시아와의 관계는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지난 3월 3일에 합의된 유엔안보리결의 2270호 채택과정에서 러시아는 끝까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입장 고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른 바 북한에 대한 성의 표시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러시아도 북한의 핵개발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책임에서 러시아도 피해갈 수 없다. 지금의 북한이 존재하게 된 근본책임은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뒷배를 보아준 나라도 러시아다. 따라서 러시아도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이는 북한의 러시아 의존도가 중국에 비해 그리 크지 않고, 러시아가 처한 경제적, 외교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북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마. 북일 관계

한때, 북한과 일본은 양자 간 필요에 따라 접촉이 전개되어왔다. 북한으로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려 한다. 아울러 한일, 미일관계의 간극을 벌여놓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아베의 공약대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차원에서 북한과 다각적인 접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진다.³⁰

하지만 북 핵실험 등으로 지금은 중단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²⁹ 일본 교도통신은 4월 18일 복수의 일본 소식통을 인용, 지난 3월 경 북한 고위급 관리가 러시아를 방문, 외교 관계자들과 핵문제와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우리들의 전투능력을 경시하고 있다. 놀라게 될 것이다. 당대회 개최 전에 고도의 전투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기서 ‘고도의 전투능력’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5월 열리는 당 7차 대회에서 핵·미사일 보유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292>> (검색일: 2016.4.30.).

³⁰ 2015년 8월에는 북한과 일본간의 다각적인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북일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였다. <http://www.ytn.co.kr/_ln/0101_201508120504544454> (검색일: 2016.4.30.).

같이 일본은 금번 북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재개하였다. 결국,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이 바라는 바, 대일관계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 유엔 및 기타국가 관계

북한은 유엔을 자기들의 입장 전달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³¹ 즉, 북핵 개발 정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방어하면서, 한미연합연습의 부당성을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당시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유엔을 방문하여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이며,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였다.³²

북한은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 아프리카 등 친북 국가들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다.³³ 벨기에 등 테러 발생 시에는 조의를 표명하는 등 마치 북한은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라는 이미지 선전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가 강력하다. 필리핀은 수빅만에 입항한 북한 선박 진태호를 몰수하고 선원들을 추방하였고, EU도 별도의 제재조치를 발표하였다. 베트남은 북한 외교관을 추방시키고 이집트도 외교활동을 하지 않는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였다. 우간다는 북한과 군사협력을 중단을 선포하는 등 그동안 북한에 전통 우방국들도 북한과 등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해 유엔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김정은의 셈법을 바로잡는 길이다.

³¹ 외무성 대변인, 4월 2일 한미연합연습 관련 유엔안보리 긴급이사회 소집 요구를 유엔이 외면했다고 비난, 미국-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이 유엔헌장에 명시된 자주권 존중원칙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핵전쟁연습이 중지되지 않고 안보리가 이를 외면하는 한 정당한 자위적 권리를 계속 행사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http://www.yonhapnews.co.kr/northkorea/2016/04/02/1801000000AKR20160402062500014.HTML>> (검색일: 2016.4.3.).

³² 북한 외무상이 매년 유엔의 정기회기인 9~10월이 아닌 기간에 유엔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파리기후변화협약 서명, 지속가능의제를 다루는 실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의 건재를 과시하고 국제사회의 그 어떤 압박과 제재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차 당대회 이후 리수용은 국제담당부위원장으로 승진했다.

³³ 김영철 통전부장이 지난 2월 라오스를 방문하여 추말리 시야손 대통령과 싸이나손 주석을 예방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북한은 캄보디아의 훈센총리의 방북초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ocutnews.co.kr/news/4546757>> (검색일: 2016.4.30.).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검증된 바는 없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북한의 핵물질 확보와 핵탄두 소형화 등 그 역량은 큰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점검하였다. 미사일의 경우도, 한국은 물론,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거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별로 없다. 탄두 재진입기술의 경우에도 단거리인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의 경우는 문제가 없고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아울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도 3~4년 이내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주목하게 되었다.

금년 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그동안 국제사회의 핵문제 해결 노력의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국제사회의 시도는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시간만 벌여 준 꼴이 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공감하기에 이르렀다.³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화해협력이라는 대북 정책의 기조를 지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정권의 변화가 긴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보다 많은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별 효과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金正은의 선행 변화를 강요하기 위한 초강수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2270호는 유엔이 만들어진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과 국제사회는 각각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발효시킨 대북제재법안 또한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이다. 이번에는 말로 김정은의 돈을 말려 그 생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³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과 러시아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북한을 향한 제재조치가 솜방망이 정도에 불과했던 것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두둔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안보리상임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중국이 앞장서 완전한 이행을 공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은 줄곧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00mm 신형방사포를 시작으로 스커드, 노동, 무수단,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 가용한 모든 미사일 발사도 발을 자행하고 있다. 김정은은 직접 핵탄두모형을 꺼내들고 흔들며 남조선 해방, 워싱턴 불바다 등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추가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대북제재는 효과가 없다. 북한을 달래서 대화의 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북한의 위장평화공세라 하더라도 호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들도 있다. 이는 제재의 문턱에 막 들어섰는데 출구로 나오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앞으로 대북제재의 실효성 여부는 한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제재 여하에 달려 있다. 제재의 효과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비로소 나타난다고 한다.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우리 턱밑까지 다다른 상황이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우리는 북한에 핵 인질이 될 우려가 있다. 현재가 분명히 위기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말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가. 북핵 인식과 접근에 대한 반성 필요³⁵

북한의 핵위협이 코앞에 이른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가져왔던 인식과 접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김정은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인식을 바꿔야 할지? 어떤 접근이 변화되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첫째, 북한은 곧 무너질 것이기에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다. 우리는 북한 체제와 정권이 불안하기에 곧 무너질 것이고, 그렇기에 북한 핵은 위협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곧 무너질 것인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태도가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장애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북한 핵은 외교적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물론, 대화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화만의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

³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의 핵도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가안보전략』, 통권 43, p. 5.

계에 봉착했다. 강력한 제재의 방법이 수반될 때 진정한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우리를 향해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다. 우리는 북한이 동족을 향해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 스스로가 민족을 향해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고, 적어도 동족인데 사용할까? 좁은 땅덩어리에서 핵을 사용한다면 공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북핵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할 현재의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제 서울과 청와대를 향해 언제라도 핵을 이용하여 공격을 감행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북핵은 우리가 맞닥뜨린 위협이다.

넷째, 북한 핵은 국제공조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다. 즉, 핵문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등 국제사회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남적화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즉, 우리를 직접 겨냥한 위협이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우선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동안 북한이 각종 남북대화에서 우리가 핵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남북간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미국과 논의할 사안이라면서 회피해 온 것이 우리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물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공조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 중심에 바로 우리가 있음을 망각해서는 곤란하다. 금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이전에 개성공단의 완전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적절하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문제 해결과 선순환 할 수 있다는 기대이다. 우리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남북 간 보다는 많은 대화와 교류를 진행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관계를 개선한다면 북한이 핵을 개발할 명분이 희석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한가? 그동안 남북 간에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하고 총리급회담을 비롯하여 회담 수백 회, 합의한 문건도 수백 건이다. 하지만 지금의 남북관계는 1970년대 남북당국간 회담이 개시된 그 시점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근본 원인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북한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회담에 호응하기는 했지만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 개성공단의 사례가 이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통해 수억 불의 외화가 유입되었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에 제대로 순기능

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가야 할 급여가 김정은 주머니로 흘러들어 가 통치자금이나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북한의 인식이나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남북대화가 열린다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는 대화 재개가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강요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끝으로,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그 어떤 조치도 적극 취할 수 없다. 그 어떤 조치로도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가 노력하는데 따라 북한은 반드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핵을 포기한 사례들이 있다. 북한은 독특한 상황이라는 점도 이해한다. 하지만, 김정은정권이 핵을 가지고 망할 것인가? 핵을 포기하고 생존할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강요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주도하는 변화노력이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변화 강요 필요³⁶

위에서 우리가 가져왔던 인식의 변화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가장 주 당사자는 우리이며 그런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김정은 정권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용한 수단들은 무엇일까?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북심리전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지난 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도발 당시 우리 군은 11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의 반응을 통해 이것이야말로 북한 핵을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핵폭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북심리전은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비대칭전력이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에게 정보와 진실을 확산시켜야 한다. 확성기 뿐 아니라 전광판, 그리고 2000년 6월 중단했던 전단과 물포작전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아울러 TV나 라디오의 경우도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송출하는 방안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속 제기하여 김정은 정권을 흔들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김씨왕조 정권 유지의 희생양이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³⁶ 위의 글, p. 6.

유린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북한사회에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 분들이 자유한국에 잘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고 그 소식이 북에 살고 있는 친지들에게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뿐 아니라 동질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우리 국민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넷째, 북한 핵무용화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즉,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강력한 억제 및 선제타격 수단을 확보하여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이를 결코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우리 군은 길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다.

끝으로, 김정은 통치자금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이는 유엔안보리 제재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뿐 아니라 양자차원의 제재를 통해 안보리제재조치의 구멍을 촘촘하게 메워야 한다. 북한의 해외근로자 파견문제는 이번 안보리제재 결의에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국들과 협조하여 북한 해외근로자를 인권문제화하여 관련국들로 하여금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지 않도록 협조해 나가야 한다. 이로써 김정은의 돈줄을 마르게 해야 한다. 김씨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통치자금이 필요하다. 돈줄이 마르게 되면 그의 생각도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이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조치는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도 되고 있다. 이번에는 말로 북한정권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핵문제를 해결하여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을 만들어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내부의 단합이 관건이다.

■ 접수: 5월 2일 ■ 심사: 5월 17일 ■ 채택: 5월 30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4.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통일부. 『남북합의서』. 서울: 통일부, 2005.

2. 논문

- 문성득. “북한 핵문제 관련 한국의 정책대안.” 『전략연구』. 제21권, 2014.
———. “통일 대북정책의 일관성 확보방안.” 『전략연구』. 제22권, 2015.
조봉현.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가안보전략』. 통권 45, 2016.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의 핵도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가안보전략』. 통권 43, 2016.

3. 기타 자료

- 『노컷뉴스』.
『동아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
『통일뉴스』.
『프론티어타임스』.
『한국경제신문』.
『한국일보』.
『KBS』.
『YTN』.

Abstract

Current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and Its Foreign Policy

Seong-Mook Moon

The strongest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is continuing unleashed by the 4th nuclear test in January and long range missile launch in 2016. This is resulted from international consensus that North Korean nuclear issue cannot be solved by existing resolutions.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 is ahead of upcoming crisis situation to us. In this circumstance,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examine the current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and also analyze its foreign policy as appropriate countermeasures should be correctly considered.

We cannot verify exact capability of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t can only be assumed that North Korea secured considerable amount of nuclear materials through erstwhile nuclear tests and developed miniaturization and weight reduction of the nuclear warhead.

While in case of long-range missiles, it seems not to seize re-entry technology of the nuclear warhead yet, but to reach a level to load them in the Rodong missiles. As a result, we need to prepare the countermeasures on the assumption that North Korea has secured the capability to directly strike us.

North Korean foreign policy seems to be related to South Korea revolutionary line. Among three revolutionary lines, it is abusing the nuclear development for strengthening international revolutionary capabilities. North Korea insists that its nuclear development is just a means of self defense against US hostility against it and in order to re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North Korea-US peace treaty should be signed, US Forces in Korea should be withdrawn, and ROK-US combined training should be discontinued. Nevertheless, US demands denuclearization prior to all other options. North Korean foreign relations not only with South Korea but also China, Russia, Japan and so on are on the skids.

South Korea is directly connected to North Korean nuclear issue. We should realize the error of our understanding 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do all our best to induce its regime change.

Key Words: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Foreign Policy, Sanctions against Pyongyang, Long Range Missile, and Miniaturization of Nuclear Warhead

